신천지 당원, 민주당 가입 없었다… 김 vs 청 갈등 커지나

〈김민석〉 〈정청래〉

민주당 신천지 조사 보고 무산
정청래 "결자해지" 책임론 제기
조작기소특검법, 당론으로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8·17 전당대회에서 주장한 당 조사 결과 '반명(反이재명)·신천지·분열주의의 제3자 비밀연합'은 없었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한 박선원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이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으나, 김 대표의 앞선 사과로 박선원 단장의 결과보고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두고 민주당 내 친김민석계와 친정청래계 간의 내부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단장이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지만, 김 대표가 먼저 말씀하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누구도 그런 부분을 인지적으로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의 표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울컥였다고 한다. 김 대표의 사과 이후 의원들은 '잘 결정했다'며 박수를 치고 조사 결과를 보고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신천지 의혹 관련해 당국에 수사 의뢰도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수사 의뢰를 하거나 더 갈등을 일으키자는 쪽으로 말씀하시거나 의견을 낸 의원이 전혀 없고 내부에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대표가 조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의 사과에 대해 '다른 의원들의 의견 표명이 없었냐'는 질문에 "대표님 사과로 보고 건은 종료됐고, 그 외는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의 경쟁 상대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비공개 의총 중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에게 김 대표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김 대표의 책임론을 띄웠다.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로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는 선거운동 초반 '반명(反이재명)·신천지·분열주의'의 제3자 비밀연합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친명계 지지자들은 비밀연합의 배후에 친청(친정청래)계가 있다며 당내 계파 갈등을 키운 핵심 소재로 당 대표 선거에 활용됐다.

신임 지도부 구성 이후, 신천지 관련 의혹이 터져나올 때마다 친청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박선원 단장이 조사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법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작기소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존 발의된 안의 자구 수정을 거칠 예정이다.

의원총회의 또다른 쟁점이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는 원내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간이 걸릴 예정이어서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국민의힘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한과 북한 지뢰 도발 관련 결의안도 본회의 통과를 노린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중요"

국무회의서 집값 안정 의지 재확인
객관적인 시장 자료 투명하게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반면, 거래량과 실거래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의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며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며 지역별로 시장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일부 세력이 시장 정보를 편향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중의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측면들이 보인다"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진 않다"면서 "그러나 그게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면서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대적 주택 공급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집값이 하락·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으며, 공포매수 심리를 누르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면서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인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국힘, 27조 삭감·11.6조 증액 예산안 제시

'국민 삶 해결 예산안' 공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불필요한 예산 27조원을 삭감하고,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소방 안전' 등 민생 분야에 약 11조6000억원을 늘리는 '국민 삶 해결 예산안'을 공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를 열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이다. 올해 국가채무 1412조8000억원에 비해 107조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채 순증가 분이 거의 없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100대 문제 사업을 찾아 총 27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안을 제시했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쓰도록 해, 국채 이자 비용 3조원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액안은 ▲청년의 삶 3조4287억원 ▲국민 안전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1조1981억원 등 총 11조5924억원이다.

청년 지원에서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다. '청년 삶 해결'에 배정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 전국 사립대·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원대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는 6950억원을 지원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 안전 지원 확대에 2조4100억원을 투입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일상 회복을 돕는 '국가책임 강화' 사업에도 5000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실질 소득을 늘리고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1조8416억원을 투입하며, 소상공인 신용취약자금은 1조2000억원으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지원 규모는 4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7440억원을 증액한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에 2469억원을 추가로 배정하고, 농업재해보험 국고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인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9800억원을 들여 '지역주도형 기업 설립'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자본금의 49%를 투자하고, 민간이 나머지 51%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지방 기업 40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24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득 안정을 돕고, 고용 형태에 따라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도 강화한다. 이 가운데 새로운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데 8881억원을 투입한다. 어르신·아동·장애인 등 돌봄 대상별로 전문 대체 인력을 확보해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에는 특별수당을 도입한다.

/박경수 기자 gws0325@

한국노총 "민주당 신뢰 무너져"… 정년연장 압박

3차 고위급정책협의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법정 정년연장 입법과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등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관계자를 초청했으나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돌아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3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오늘 65세 법정 정년연장, 초광역특구 조성, 공공기관 기능개편과 지방이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운을 띄웠다. 김 대표는 지난 9월10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 등 한국노총 관계자를 당사에 초청해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두고 "지난해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 과정들을 잘 아시고 현재까지 저희의 고민과 진전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초광역특구 조성은 현재 노사와 관계부처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함께 한국노총과 대화를 해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측은 정책연대를 유지하고 싶으면 법정 정년연장안 처리와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폐지로 실천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박태홍 기자